

# “청년은 월세방, 공직자는 투기”... ‘분노’

### 20·30세대 “난 집 포기한 ‘N포세대’인데”

### “컨트론타워가 투기행위 드러난 상황”

### “공직자들이 사익추구하는 투기꾼 같아”

### “정부 정책 믿기 어려워...강력 처벌해야”

‘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명 ‘N포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그 어느 연령대보다 크게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뉴시스와 통화한 백모(29)씨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러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백씨는 “최근 집값이 엄청 올랐을 때 지인들과 ‘내 생애 집은 못 사겠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신도시 주무부처 공직자들이 정보로 토지를 거래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20·30세대는 흔히 ‘N포세대’라고 불린다.

2010년대 초반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으로 ‘삼포세대’라는 단어가 유행했고, 이후 취업, 주택 구입 등이 더해지며 N포세대가 됐다. 포기할 영역이 특정 숫자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특히 청년 층은 주택구입을 포기한 세대라고 불리는데,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를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한 ‘동학개미’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모(31)씨는 “호재를 알고 땅을 사는 행위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역린인데, 공직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익을 추구하는 투기꾼 같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사기업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하면 처벌을 받는데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로 투기를 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경찰에서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 청약, 분양 방법 등 정보를 얻기 위해 종종 LH 홈페이지를 찾은 경험이라는 강모(31)씨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문구가 있더라. 국민 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신도시 예정 지역에 땅을 산 것 아닌가. 거짓말로 포장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영역은 정부의 경제 정책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사안임에도 공공기관 외부에서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사실에 대한 비판 목



소리도 나왔다.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모(30)씨도 “컨트론타워가 투기행위를 했다고 드러난 상황인데, 정부 정책을 더는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사회 전체 차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고 했다.

오씨는 “LH 일부 직원들은 내부정보로 쉽게 큰돈을 번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상황에서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신도시 투기지역을 전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직장인 박모(35)씨는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투기 세력을 비난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투기 세력의 일부라고 드러나게 아니냐”며 “당장 소규모 청년 주택 정책 발표를 봐도 ‘누가 얼마를 해먹었을까’ 의심하게 되는게 사실이다”고 했다.

부동산업계에서 종사하는 이모(30)씨 역시 “LH 직원의 투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밖에서 그렇게

의심해왔다”고 전했다.

또 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글이 분노를 자극했다는 시각도 있다.

청년단체들은 결국 단체행동에 나선다. 한국청년연대, 청년하다, 청년진보당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LH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촛불을 들고 기자회견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청년들은 월세를 전전하는데, LH는 투기를 전전했다”고 비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의혹이 제기된 후 신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 우려가 제기됐다. LH직원 뿐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 고개를 들며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민정기자

## 대형선박 청소 중 오염물질 버린 업체 대표 등 3명 송치

서해해경청정 15일 대형선박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부산지역 수중공사업체 대표 A(50)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남 여수 등 국내 주요 항만에 입항하는 대형선박의 바닥을 청소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하지 않은채 340여 회에 걸쳐 바다에 그대로 버린 혐의다.

국제해사기구(IMO)에 가입한 일부 해양 선진국의 경우 선박부착 생물의 자국 내 침입을 막기 위해 입항 전 선체 외관에 대한 청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중업체에서는 입항하는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검거된 업체는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의 선저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는 페인트 및 부패 유기물은 물론 부착생물과 외래종 생물까지 포함될 수 있어 심각한 해양오염과 함께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수중에서의 선저세척 작업은 잡수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함께 해양환경오염 피해가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허가내용과 다른 선저세척 작업을 하는 수중공사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집합금지 명령 어긴 유희주점 PC방업주 벌금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희주점·PC방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유희주점에서 손님 4명이 드림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하고 술·안주를 제공,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유희주점 등 감염병 발생 고위험 시설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방역·예방 조치 중요성 등에 비춰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만취·과속→추락사고’ 친구 숨지게 한 20대, 2심 실형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추락 사고로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전 1시16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 편도 5차선 도로(어등대교 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락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고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된 구간서 120.5km로 주행하다 오른쪽 차랑 진입로를 가로질러 가로등·가드레일·가로수를 들이받고 8m 아래 도로로 추락, 차랑에 불이 나게 했다.

1심 재판장은 “A씨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했다. A씨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A씨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탄 점,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쓰레기 위에 집 지을 뻔” 담양 택지지구, 불법 폐기물 논란

### 아름드리 나무 뿌리와 묘비석·제단용 상석 등 발견



“하마터면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지어 훗날 큰 낭패를 볼 뻔 했어요.” 전남 담양군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택지용지에 한창 집을 짓던 A씨는 15일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하 1층 터파기 공사 도중 난데없

이 1t 남짓한 아름드리 나무 뿌리와 묘비석, 제단용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상석 등이 발견됐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을 판단, 중장비를 동원해 일대를 모두 파헤친 결과 거대한 고목 뿌리와 비석 등이 줄줄이 나왔다.

개당 수백kg에 이르는 묘비석에는 고인의 이름 석 자와 본(本) 등이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었다.

문제가 된 폐기물들은 택지 조성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했거나 외부에서 반입된 뒤 불법 매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부지에서는 하천 준설토가 사

용가 나와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단독주택 부지 180여 평을 분양받은 A씨는 자칫 불법 폐기물 더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뻔 했다.

A씨는 “지하 1층을 설계하지 않았다면 훗날 나무뿌리가 썩고 지반이 무너지면서 집안 곳곳에 금이 가고 붕괴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개해 했다.

A씨는 특히 “우리 집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법이 있겠느냐”며 “모든 단독택지 용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